

JEONBUK INSTITUTE AGENDA 10

전북연구원이 선정한
2018 전라북도 정책아젠다

“

2018

2018.01.10

연구진

김동영 김재구 김상엽 김수은 김시백 김형오
나정호 오병록 이동기 이성재 이증섭 이지훈
임승현 장남정 장성화 조경옥 조승현 황영모

ISSUE BRIEFING

이슈브리핑 특집호 2018년 1월 10일 발행인_이강진 연구원장 대행 발행처_전북연구원 주소_전북 전주시 완산구 콩쥐팍쥐로 1696
TEL : 063)280-7100 FAX : 063)286-9206
※이슈브리핑에 수록된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전라북도의 정책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지난 호 이슈브리핑을 홈페이지(www.jthink.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2018 지방분권 시대와 전라북도 새천년 개막

2018년은 문재인정부가 제시한 지방분권 공화국의 개막과 민선6기 성과를 바탕으로 민선7기가 새롭게 도약하는 해로 전라북도 자존의 시대를 개막할 수 있는 최적의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정부는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자치복지권'의 4대 지방자치권을 지방자치단체에 보장하여 중앙정부에 초집중화된 권한을 지방정부로 이양하는 지방분권을 추진하고 있어 2018년은 지방분권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해가 될 것이다. 또한,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잘 사는 균형발전 정책이 실질적인 예산과 사업으로 본격화 되는 해이다.

1 지역성장거점

지역성장 거점화를 통한 전북발전전략 업그레이드

1. 새만금, 혁신도시, 동부권 3대 성장축 연계발전
2. 전북혁신도시 시즌2로 신성장 거점육성
3. 도시재생 뉴딜의 전북특성화모델 찾기과 일자리 연계

2 농업·농촌

농업, 농촌, 농민의 소득주도 성장으로의 전환축

1. 농민 소득주도 성장을 이끌 삼락농정 강화
2. 먹거리 종합정책 푸드플랜으로 농촌 활력 증대
3. 삶의 질과 관광이 어우러진 살기 좋은 농산어촌 조성

3 전라도천년

전라도 천년, 역사문화 체험여행 일번지로 비상

1. '2018 전라도 방문의 해' 성공적인 운영
2. 전라북도 가이샤 복원과 활용을 위한 종합로드맵 수립
3. 신정부 관광정책과 전라북도 토틀관광 2단계 연계방안 마련

4 신산업

초융합화, 지능화, 서비스화로 전북 고부가 신산업 육성

1. 전북의 미래먹거리 초융합콘텐츠 산업육성
2. 농생명산업과 지능화기술의 만남,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 밸리
3. 4차산업혁명 기술융합을 통한 금융타운 혁신성장 기반구축
4. 탄소 소재산업에서 초융합 응용산업으로 발돋움

5 새만금

새만금에 부는 훈풍(薰風)과 새로운 돛의 만개(滿開)

1. 공공주도 매립을 전담하는 새만금개발공사 설립
2. 2023 세계잼버리 준비 및 고군산군도 해양거점화 시작
3. 국가집중투자로 새만금 핵심기반시설 조기완공
4. 예타면제 등 제도적 장치를 통한 속도감 있는 새만금개발 지원

2018 AGENDA 10

전라북도는 민선6기를 통해 도 단위 최초 전북연구개발특구 지정, 탄소산업육성법 제정, 전국 최초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도입, 생생마을 700여개 조성, 전국 최초 전북투어패스 안착,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 등재, 새만금 국정과제화,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성공개최,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 유치, 전국체전 유치 등을 통해 ‘한국 속의 한국, 생동하는 전라북도’의 초석을 다졌다.

여기에 그동안 전라북도 최대 현안사업이자 숙원사업인 새만금국제공항, 새만금개발공사 설립을 통한 공공주도 매립, 탄소복합재 신뢰성 시험평가 기반구축사업, 연기금 전문대학원 설립, 국립지역권 산림치유원 조성,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조성 등 국가사업 예산이

대거 국회를 통과하면서 전북발전을 위한 걸림돌 또한 제거되었다. 2018년은 명실공히 전북자존의 시대를 본격적으로 개막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춘 해이자 전북발전을 위한 새로운 비전을 준비해야 하는 기회이 한 해가 될 것이다.

이를 위해 전북연구원은 2018년을 문재인정부의 본격적인 정책추진과 지방분권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전라북도의 대응전략과 과제를 준비하고 전북숙원사업의 성공적 국정과제 반영과 민선6기의 성과를 토대로 새로운 전라북도 발전전략을 모색하는 해로 설정했다. 2018 전라북도 10대 아젠다는 지방분권 시대와 전라북도 새천년 개막을 위한 2018년도 전라북도 도정의 방향타가 될 것이다.

6 일자리창출

소득 주도형 일자리 창출을 통한 상생 경제 발전 추구

1. 청년 활동성을 보장하는 일자리 지원 확대
2. 혁신창업 환경 조성으로 혁신일자리 창출
3. 지역 산업 연계형 여성 일자리 확대로 경제활동인구 확보
4. 전북형 중소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7 균형발전

차별없는 지역, 차별화된 지역으로 균형발전 구현

1. 국토 동서균형발전 촉 강화
2. 지역균형발전 가속화
3. 혁신창의형 지역활력증진계획 수립

8 지역순환경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민생경제 · 사회복지 · 사회경제 활성화

1. 지역경제의 버팀목, 소상공인 육성과 골목경제 활성화
2. 일자리 연계형 포용적 복지서비스 제공기반 구축
3. 지역사회에 기반한 사회적경제 생태계의 구축

9 안심사회

위험을 알고, 줄이고, 피할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사람중심 안심전북

1. 재해취약성 평가를 통한 전북형 스마트 지진 대책 추진
2. 탈원전 정책 및 신재생에너지 3020 선도를 위한 기반 마련
3. 통합물관리 모델 구축 및 미세먼지 대책 구체화
4. 젠더폭력 사각지대 해소 및 폭력 예방체계 마련

10 자치분권과 지방선거

자치분권으로 내발적역량 강화, 지방선거로 전북비전 실현계기

1. 전북형 지방분권 로드맵 수립과 체계적 추진
2.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재정분권 내실화
3. 주민 중심의 전북형 주민자치 활성화
4. 지방선거와 미리보는 전북비전 2022

01 지역성장 거점화를 통한 전북발전전략 업그레이드

정부의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에 발맞춰 전북발전을 위한 지역거점의 육성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새만금, 혁신도시, 동부권의 성장거점을 중심으로 혁신성고를 주변지역으로 확산하는 지역성장 거점화를 통한 허브 앤 스포크 전북발전전략의 업그레이드 전략이 실현되어야 한다. 혁신도시 시즌2를 중심으로 농생명, 연기금, 지식·공간·문화서비스 분야의 전략산업 육성전략의 구체화가 필요하다. 인구감소, 도시쇠퇴, 지방소멸로 이어지는 심각한 위기상황에 대응해 국정과제로 추진되고 있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지역특성에 맞는 모델찾기와 일자리 및 소득으로 연결하는 전략 또한 모색되어야 한다.



추진과제 1.

새만금, 혁신도시, 동부권 3대 성장축 연계발전

2018년은 새만금신공항 조성과 공공주도 매립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상징적 해가 될 것이다. 군산, 김제, 부안 등 새만금권역은 미래산업, 신재생에너지, 스마트팜, 관광레저 등의 본격개발에 대비한 발전전략을 새롭게 모색해야 한다. 혁신도시 주변지역인 전주, 완주, 김제, 익산, 정읍 등은 농생명, 연기금, 지식·공간·문화서비스 분야에서 전라북도의 새로운 혁신성장 거점으로 육성되어야 한다. 동부권은 산악힐링사업의 본격적 추진과 가야문화권을 통해 충청과 영남 그리고 수도권으로의 확장전략의 선봉이 되어야 한다. 2018년은 새만금, 혁신도시 시즌2, 동부권의 새로운 발전전략 추진에 맞는 새로운 지역발전 전략을 준비하는 한해가 되어야 한다.

추진과제 2.

전북혁신도시 시즌2로 신성장 거점육성

전북혁신도시 시즌2는 농생명·연기금·지식·공간·문화서비스 분야에서 대한민국 청년창업 리딩도시를 추진목표로 전북의 새로운 성장거점육성을 계획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인재양성과 창업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전북혁신캠퍼스 구축을 통한 청년 벤처창업 생태계 구축, 국가혁신클러스터와 농생명, 금융 특화 블록체인실증센터 건립 등을 통한 혁신주도 성장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또한, 공공기관 2차이전과 공간정보 융합 클러스터 등과 같은 협력상생 연계발전 기능 강화와 복합환승센터 등의 정주여건 개선이나 책마을과 같은 이전공공기관 연계 도시재생모델 및 제2혁신도시 개발 등을 통한 공간 재정비가 이루어져 한다. 전북혁신도시 시즌2는 이전기관의 혁신역량을 창업으로 유도하여 전라북도 혁신성장의 거점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추진과제 3.

도시재생 뉴딜의 전북특성화모델 찾기와 일자리 연계

국가는 5년간 50조원의 재정을 투입하여 도시개발이 아닌 도시혁신을 이루려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도시의 혁신을 지자체가 주도하도록 권한과 역할을 부여하고 있어, 지역의 강점을 부각한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으로 쇠퇴지역의 활성화와 경제활력 제고를 통해 전라북도 저변의 성장기반을 공고히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혁신도시 이전기관과 연계하여 '농촌정원마을', '독서모델마을', '스마트공간정보도시' 등 특성화된 도시재생 뉴딜의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 도시재생은 향후 경제적 재생과 연계하여 지역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활성화와 연결되도록 지역성장전략과 연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02 농업, 농촌, 농민의 소득주도 성장으로의 전환축

개방화 이후 우리농업은 지속가능성을 상실해가게 되었고, 농촌은 피폐해져 갔다.

농업을 소득수단으로 농촌에 살고 있는 농민은 삶의 모든면에서 도시민과의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다. 농촌의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이유이다. 도시로 이동한 농촌인구는 도시의 문제인 주택문제, 교통문제, 환경문제를 더욱 가중시키는 원인이다. 그래서 균형발전 정책이 추진되는 것이다. 농촌은 지속가능성이 필요하다. 농촌의 지속가능성 확보는 삶의 질 유지와 안정적 소득에 있다. 농가의 소득기반을 확충하고, 도시와 차별없는 생활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그래야 농민이 농촌에 농업을 하면서 살 수 있다.



추진과제 1.

농민 소득주도 성장을 이끄는 삼락농정 강화

농가소득을 향상하는 대응체계가 필요하다. '자치농정과 협치농정'실현을 위한 정부의 농정혁신이 추진되고 있다. 하향식 농정에서 상향식으로, 설계농정에서 참여농정의 전환이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다. 전라북도의 '삼락농정'은 참여형 지방농정의 혁신모델로 평가되고 있다. 농업계, 전문가, 관계기관을 망라한 '삼락농정위원회'는 전북농정의 혁신전략을 마련하고, 분야별 중점과제를 도출해 정책화하고 있다. 농어민의 농정참여를 제도화하는 농업회의소 법제화에 대응하여 '삼락농정'의 강화를 통한 협치농정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아젠다형 농정체계의 선도적 도입과 정책, 제도, 예산 등의 통합적 조정이 필요하다.

추진과제 2.

먹거리 종합정책 푸드플랜으로 농촌 활력 증대

먹거리가 안전한 건강한 대한민국을 위해 먹거리 정책의 전환이 시도되고 있다. 푸드플랜은 먹거리 전략이다. '생산~가공~유통~소비~재활용'의 지역 먹거리 순환체계 구축이 핵심이다. 식생활 악화, 먹거리 불안감 증대, 먹거리 양극화 확대, 정책의 분산실행 등에 대응해 나가야 한다. 국가와 지역의 푸드플랜은 먹거리를 매개로 농업·농촌문제와 도시·소비문제를 해결하는 유력한 정책수단이다. 시·군과 전라북도의 지역 푸드플랜 수립이 중요하다. 학교급식, 공공급식, 로컬푸드, 먹거리복지, 식품안전, 식생활 교육 등을 망라하는 종합적 정책이 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실질적인 정책추진을 위한 추진체계(위원회, 지원센터 등)를 잘 갖춰야 한다.

추진과제 3.

삶의 질과 관광이 어우러진 살기 좋은 농산어촌 조성

저출산·고령화로 '지방소멸'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농산어촌지역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서는 읍·면 소재지를 중심으로 한 거점지역을 최후의 보루로 사수해야 한다. 지역의 향토산업을 기반으로 한 신활력 플러스사업 등과의 연계를 통해 지역별 특화된 농촌중심지 활성화 정책의 육성이 중요하다. 이를 주민들의 소득향상 및 일자리 창출과 연계하여 시너지효과를 창출하기 위한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산림자원은 도민에게는 휴식을 주고 농민에게는 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 소중한 자원이다. 산림치유공간을 통한 관광객 증대와 지역주민을 위한 숲속 문화시설 조성, 그리고 지역별 특화 임산물 육성을 통해 산림소득 증대를 모색해야 한다. 어촌은 내수면 생산과 더불어 수산식품소비, 수계 중심의 어촌관광 등을 연계하여 어촌공간에 대한 다양한 수요에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전라북도의 특색 있는 어촌 문화를 창출하고, 살기 좋은 어촌을 만들기 위한 어촌공간 활용방법을 고민해야한다. 어촌을 활용한 특색 있는 사업추진을 지원하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03

전라도 천년, 역사문화 체험여행 일번지로 비상

신정부의 문화·관광분야 국정목표는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로 정책·제도가 추진될 전망이며, 국정 전략으로 자유와 창의가 넘치는 문화와 예술, 국민의 휴식제고를 위한 관광 및 관광진흥을 설정하고 있다. 전라북도는 ‘한국체험관광 1번지, 전북관광’이라는 비전 아래, ‘전북투어패스’, ‘1시군 대표관광지’, ‘1시군 1생태관광지’조성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왔으며 지역관광 경쟁력 제고 측면에서 기여한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2018년도에는 한층 더 중앙정부 정책과 연계하여 전라북도 문화·관광 핵심 사업의 고도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세부 추진과제별로는 2018 전라도 천년 해 기념사업인 ‘전라도 방문의 해’를 성공적으로 운영해야 하며, 전북 고대문화유산의 세계화를 위해 전북 가야사 관련 사업의 종합 로드맵을 체계적으로 수립해야 한다. 또한 전라북도 토탈관광 성과 분석을 통해 신정부 관광정책과 연계한 토탈관광 2단계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추진과제 1.**‘2018 전라도 방문의 해’ 성공적인 운영**

2018년 전라도 천년기념 ‘2018 전라도 방문의 해’는 ‘전라도 천년 기념식 및 문화행사’, ‘전라도 천년사 편찬을 통한 전라도인의 자긍심 고취’, ‘전라도 천년 역사 재조명과 활용 학술포럼’, ‘전라도 관광 100선’, ‘전라 GO! 모바일 스탬프 투어’ 등의 다양한 기념행사가 개최될 예정이다. 전라도 천년 준비행사가 전라남도과 광주 중심으로 추진됐다면 전라도 천년 기념식 및 전라도 상징공간 조성 등은 전라북도 중심으로 추진된다는 점에서 2018 전라도 천년의 의미는 남다르다. 공동행사를 통해 전라도 천년 역사를 재정립하고 지역 간 화합과 상생을 도모하여 전라도인의 자존감 회복과 전라도의 위상 제고를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추진과제 2.**전라북도 가야사 복원과 활용을 위한 종합로드맵 수립**

2017년 6월 1일 문재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고대 가야사 연구 복원 사업을 지방 정책공약에 포함시켜 추진하라는 지시가 있었다. 이에 남원·장수를 비롯한 동부권의 전북가야에 대한 연구·발굴·활용사업 등이 활발하게 진행될 예정이다. 전라북도는 지난 11월 진안에서 봉수왕국 전북가야 선포식을 통해 오랫동안 잠들었던 가야사를 깨우는 작업을 시작했다. 또한 2018년도 국가예산에 ‘전북 가야사 연구 및 복원 사업’이 반영되었기에, 향후 전북가야 전체에 대한 현황과 역사고증, 가야유적의 향후 정비 및 활용방안 등이 포함된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

추진과제 3.**신정부 관광정책과 전라북도 토탈관광 2단계 연계방안 마련**

신정부 관광정책 기조는 관광정책을 관광복지적 관점과 산업혁신적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전자의 관광복지가 ‘분배’중심의 관광정책이라면, 후자의 관광산업 활성화는 ‘성장’중심의 관광정책이다. 이에 신정부 관광정책과 토탈관광을 연계한 전북형 복지관광모델 사업과 글로컬 핵심 관광콘텐츠 발굴을 위한 추진방향과 추진과제 도출이 필요하다. 세부적으로는 2018 한국관광의 별에 선정된 전북투어패스의 안정적 정착 및 이용률 확대, 1시간 1생태관광지의 대한민국 명품관광지 육성, 2018전국체전의 성공적 개최와 4차 산업혁명 대비, 지역 문화콘텐츠를 활용한 스마트 문화관광 기반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러한 과제들의 실천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북도의 행·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며, 관련 기관에서는 이에 대한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04 초융합화, 지능화, 서비스화로 전북 고부가 신산업 육성

신정부의 4차 산업혁명 대응 정책은 초융합, 지능화, 서비스화로 정의된다. 이에 전북 고유자원이라 할 수 있는 전통문화에 ICT 및 과학기술의 융합을 통해 초융합콘텐츠산업을 미래 전북의 먹거리로 만들고, 지역 농생명 혁신자원과 지능화 기술을 결합시켜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 밸리의 기반도 다져야 할 때다. 아울러 저부가 중심의 지역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연기금 특화 금융중심지 지정을 통해 고부가가치 금융업을 키워나가야 한다. 또한 탄소소재를 활용하여 이차전지, 신재생에너지, 드론, 잼버리 캠핑용품 등 타산업융합 및 지역 내 기업육성을 전담으로 서비스할 전담기관 설립의 법률적 근거 마련도 이루어져야 한다.



추진과제 1.**전북의 미래먹거리 초융합콘텐츠 산업육성**

신정부는 사람이 중심 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ICT 기반 융합콘텐츠 분야의 산업적 생태계 구축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전북은 기능성게임, 백제문화유산, 무형유산 등 문화자원이 풍부하고 전라북도문화콘텐츠진흥원 설립과 소리산업 육성 등 ICT기반 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하여 그간 노력해왔다. 지역거점형 콘텐츠기업 육성센터 조성은 향후 콘텐츠 융복합산업의 거점역할이 기대된다. 2018년도는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혼합현실(MR)/홀로그램(HR) 등 실감콘텐츠 분야에 있어 ICT와 R&D기반의 대형 국책사업 추진과 국가공모사업 유치 확대를 통해 초융합콘텐츠를 전북의 지속가능한 미래 먹거리로 육성해야 한다.

추진과제 2.**농생명산업과 지능화기술의 만남,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 밸리**

전라북도의 5대 핵심 클러스터 조성 계획의 실천과 농생명산업 가치사슬의 완성도 제고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혁신도시는 농생명 관련 기관의 추가적인 집적을 통해서 네트워크 효과를 강화할 필요가 있고, 국가식품클러스터는 2단계 사업을 추진하여 투자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새만금 농생명용지는 당초 종합계획에 따라 용지조성이 이뤄질 필요가 있고, 전국 최대규모의 스마트팜 단지로 조성되어야 한다. 종자·농기계 클러스터는 스마트 육묘산업과 지능형 농기계 산업의 육성이 필요하다. 미생물클러스터는 선도기술 확보를 위해 마이크로바이옴(Microbiome) 분야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 밸리는 농업을 통한 전라북도 혁신성장의 새로운 모델로 육성해야 한다.

추진과제 3.**4차산업혁명 기술융합을 통한 금융타운 혁신성장 기반구축**

연기금 중심에서 농생명 투자로 확대를 모색하고 있는 전북금융타운은 AI, 블록체인 등 4차산업혁명 기술과 연계한 새로운 혁신성장 기반을 모색해야 한다. 금융전문대학원 설립을 위한 예산이 확보됐고 연금관리공단을 포함한 공공기관의 지역연계발전을 의무화하는 정부의 균형발전특별법 개정도 마무리될 예정이다. 전라북도는 1차로 2018년 금융중심지 지정을 목표로 정확한 컨셉과 타겟을 명확히 해야 한다. 이를 기반으로 금융 관련 기업뿐만 아니라 대체투자, 농생명 금융, 블록체인과 AI 연계 금융산업, 핀테크 등의 새로운 성장기업을 유치하는 금융타운 조성의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

추진과제 4.**탄소 소재산업에서 초융합 응용산업으로 발돋움**

내년부터 전주탄소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이 본격화된다. 또한 탄소복합재 상용화기술센터와 신상품 개발지원센터 등을 건립하여 탄소소재 응용산업 육성의 하드웨어적 기반이 마련될 예정이다. 전기상용차, 이차전지, 신재생에너지, 항공기와 드론, 잠버리를 활용한 캠핑 및 스포츠 용품 등 탄소응용제품이 다양하게 개발되고 시장이 창출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적 산업육성을 서비스할 전담기관 설립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2018년도에는 탄소산업진흥법 개정을 통해 탄소산업진흥원 설립 근거를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

05 새만금에 부는 훈풍(薰風)과 새로운 돛의 만개(滿開)

문재인정부 출범과 함께 지지부진하게 진행되던 새만금에도 훈풍이 불고 있다. 2017년 새만금사업은 국정과제로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약속과 함께 청와대 비서관이 직접 새만금사업을 행하는 등 대규모 국책사업으로서의 위상을 재확인하였다. 2018년에는 공공주도 매립, 물류교통망(국제공항, 신항만 등) 조기 구축 등 새만금 사업추진을 위한 방안과 지원이 구체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2023 세계잼버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본격적인 준비 작업과 함께 상반기에는 고군산군도 연결도로 완전개통으로 천혜의 비경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다가올 것이다. 지금 부는 훈풍을 기회로 삼아 속도감 있는 새만금개발을 위한 새만금개발공사 설립, 세계잼버리와 고군산군도 활용, 기반시설 조기 구축, 제도개선 등이 포함된 새로운 돛을 올릴 시기가 왔다.



추진과제 1.

공공주도 매립을 전담하는 새만금개발공사 설립

2017년에는 새만금개발공사 설립을 위해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었고, 설립비용으로 2018년 국가예산 510억 원까지 확보하였다(12.5 현재 상임위 통과). 신설될 새만금개발공사는 공공주도 매립을 전담하고, 새만금사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추진을 위한 총괄사업시행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이제 새만금특별법 개정을 통한 설립 근거와 예산이 마련되었으니, 앞으로 남은 것은 대규모 국책사업 추진에 걸맞은 조직구성과 함께 자본금 마련, 새만금개발공사와 새만금청의 전복안착 등의 후속 조치가 조속히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추진과제 2.

2023 세계잼버리 준비 및 고군산군도 해양거점화 시작

2023년 새만금 세계잼버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공공주도 세계잼버리 개최 부지 매립, 세계스카우트센터 설립 추진 등 본격적인 준비가 시작된다. 또한 2018년 상반기에는 고군산군도 연결도로가 완전 개통되어 '사람이 모이는 새만금'조성과 함께 전라북도 대표 해양관광거점 육성과 서해안권 해양관광벨트 구축을 선도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2018년에는 성공적인 세계 잼버리 개최와 고군산군도 해양관광거점화의 첫 단추를 잘 끼우기 위한 전략적 대응과 열정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추진과제 3.

국가집중투자자 새만금 핵심기반시설 조기완공

새만금 내부간선도로 및 새만금-전주 고속도로는 새만금 내부개발을 촉진하는 핵심기반시설로 2023년 이전에 반드시 완공되어야 한다. 또한 새만금 개발 지원과 전라북도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새만금 국제공항은 사전타당성 검토의 신속 추진 및 예타 면제 등의 패스트트랙 적용으로 세계잼버리대회 이전 개항되어야 한다. 새만금사업은 현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국가핵심사업이므로, 새만금사업의 성공적 개발을 견인하는 핵심기반시설(도로, 철도, 공항, 항만)은 국가 주도 집중 투자로 조기완공이 절실하다.

추진과제 4.

예타면제 등 제도적 장치를 통한 속도감 있는 새만금개발 지원

새만금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의 가장 큰 걸림돌은 개별사업들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내부도로인 동서2축 및 남북2축 도로와 새만금 생태환경용지 1단계사업, 새만금수목원 등이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진행되고 있으며, 앞으로 진행될 매립, 국제공항 등 세부사업에 대해서도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해야만 하는 실정이다. 예비타당성조사는 새만금사업 이후인 1999년 도입되었다. 속도감 있는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기본계획(MP)과 광역기반시설 설치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며, 한중경협단지로 추진 중인 새만금사업에 대한 예타 면제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06

소득 주도형 일자리 창출을 통한 상생 경제 발전 추구

문재인 정부의 경제 분야 최대 이슈는 ‘사람 중심 지속성장 경제 시스템 구축’으로 공공사회서비스형, 지역연계형, 민간-공공 협력형 등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일자리 창출이 진행될 것이다. 이에 따라 전라북도는 기업 유치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및 벤처 창업 기업의 경쟁력 확보 등의 기업 육성 정책과 함께 청년, 여성 등의 사회적 약자의 일자리를 발굴하여 도민의 전반적인 소득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산업의 수요 증가를 유도하여 일자리 증가로 이어지는 지속가능한 상생 경제 발전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



추진과제 1.**청년 활동성을 보장하는 일자리 지원 확대**

전라북도 청년들은 학교 졸업 이후 직장을 구하지 못하여 대학 및 대학원에 진학하거나 구직을 포기하는 등 비경제활동인구로 전환되거나 직장을 찾아 전라북도를 떠나고 있는 현실이다. 전라북도 청년들의 이탈을 막고 신규 청년 유입을 도모하기 위해서 취업 준비 단계에서 문재인 정부의 청년 구직활동 보장 정책과 연계한 전북형 구직 촉진활동 지원 사업을 준비해야 한다. 또한 청년의 활동성을 보장하고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문화창작형, 청년창업형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지역정착 일자리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

추진과제 2.**혁신창업 환경 조성으로 혁신일자리 창출**

정부와 지역의 창업촉진정책의 추진으로 신설법인수의 증가 등 창업이 양적으로 확대된 반면 질적 측면에서의 혁신성은 미흡한 것으로 지적되어 왔다. 전라북도 신설법인수는 지난 8년간 130% 증가(2008년 1,204개 → 2016년 2,799개)하는 등 일자리 창출에 기여했지만, 생계형 창업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전북형 메이커 스페이스 조성, 지속가능한 지역 창업생태계 허브 조성 등 지역혁신창업 기반을 강화하고, 벤처육성촉진지구 확대를 통해 기술창업, 기회형창업 등 혁신창업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

추진과제 3.**지역 산업 연계형 여성 일자리 확대로 경제활동인구 확보**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30년 이내 1/3에 해당하는 지방소멸 등의 인구구조 변동과 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여성고용률을 높여야 한다. 출산율 등락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안정적인 고용률과 혼인율이다. 일자리와 교육을 목적으로 타 지역으로의 인구유출이 심각한 전북은 출산의 95%를 차지하는 20~39세 여성이 살고 싶어 하는 지역을 만들기 위해 청년여성과 경력단절여성 일자리 확대를 고용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 청년여성고용무할당제 도입을 통해 청년여성의 타 지역 유출을 억제하고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활성화를 위해 '새일센터' 기능강화 등을 통해 지역 산업수요 연계형 여성일자리 창출 추진이 필요하다.

추진과제 4.**전북형 중소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조선업 등 기존의 주력산업이 성장 침체기에 들어섬에 따라 지역 경제 성장 동력 약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이탈을 최소화하여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금까지 전라북도는 주력산업을 대상으로 꾸준히 기업 유치 성과를 거두어 왔으나, 주력산업의 성장 침체에 따라 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효과는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신설됨에 따라 중소기업의 육성 정책이 체계화되고 사업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전라북도의 자생적 성장을 위해서는 이제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전라북도 유망 중소기업에 대한 혜택을 강화하고 적극적으로 고용을 확대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07 차별없는 지역, 차별화된 지역으로 균형발전 구현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5대 목표 중 하나인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과 국정 4대 복합·혁신과제로 선정된 '균형발전', 그리고 균형발전비서관 신설 등은 현 정부의 균형발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10여 년 전 노무현 정부의 균형발전정책은 정부 주도하에 시군 단위로 추진되었지만 지금은 국토 횡축과 종축의 연계를 통해 공간적 외연을 확대하고 전북 중심의 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그동안 국가발전 축에서 뒤쳐졌던 전북발전의 기회가 도래함에 따라 국가차원의 균형발전은 물론 지역 내 균형발전을 가속화시켜 전북의 경쟁력을 제고시키는데 도민의 역량을 모아야 한다.



추진과제 1.

국토 동서균형발전 촉 강화

국토의 효율적 관리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남북축 발전에서 이제는 동서화합을 목표로 동서축 발전에 집중해야 한다. 최근 전남과 경남을 중심으로 한 남해안 발전거점 조성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전북 또한 충청권과 대구·경북을 연계하는 국토 중부벨트를 조성하여 규모의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전북의 메가탄소밸리와 대구·경북의 융복합탄소성형클러스터를 연계한 新산업벨트를 구축하여 부가가치를 제고시키고, 해양선사문화(전북), 백제문화(전북·충남), 가야문화(전북·경북), 유교문화(경북) 등을 활용한 중부문화벨트 조성을 검토해야 한다. 그리고 새만금과 대전·세종을 연계하는 광역도로망 강화와 새만금~대구 고속도로, 새만금~김천철도 등 동서 광역인프라 구축도 중요한 과제이다.

추진과제 2.

지역균형발전 가속화

전라도 1000년을 맞아 전북과 전남의 상생협력을 위한 노력이 가속화되고 있다. 대선 지역공약으로 선정된 노령산맥권 휴양 치유벨트 조성, 섬진강 자원을 활용한 상생협력 등 경쟁력이 높은 전북의 산림·수변 자원을 적극 활용한 관광명소를 조성하여 전남과 인접한 전라북도 외곽지역의 경쟁력을 제고시켜야 한다. 그리고 2020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동부권특별회계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사업지원 범위, 지원방식, 추진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동부권특별회계가 도내 동부권 6개 시군의 균형발전을 더욱 가속화시킬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과 노력이 필요하다.

추진과제 3.

혁신창의형 지역활력증진계획 수립

지역의 창의적인 특화발전이 곧 균형발전의 출발점이다. 균형발전이라는 정책아래 모든 낙후지역이 유사한 자원을 활용하여 유사한 사업을 추진할 경우 국가차원의 균형발전은 물론 담보할 수 없다. 낙후지역이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인구감소와 고령화, 저성장 등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활력증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계획의 방향은 지역 내 비교우위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내발적 역량 강화와 인구, 자원, 접근성 등에서 오는 태생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도시의 사람과 자본 유입을 통한 규모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외생적 수요를 적극 활용하는 전략이 우선되어야 한다. 그리고 세부적으로는 청장년 인구 순유입 및 정착, 은퇴인력의 귀촌 및 현지 취업,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역연고산업 육성, 혁신친화적 지역만들기 등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08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민생경제 · 사회복지 · 사회적경제 활성화

성장과 개발에 뒤쳐진 지역의 어려움이 여전하다. 지역경제의 위축은 경제활동 기회를 줄이고 인구감소로 이어져 사회복지 서비스까지 원활하지 않다. 경쟁중심의 경제활동 방식으로는 지역주민이 생활에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채우기 어렵다. 지역사회의 필요는 수요-공급에 따른 수익성으로는 맞출 수 없기 때문이다. 바로 이점이 문재인 정부가 국정과제를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두고 있는 이유이다. 사회적경제는 '공동체 이익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위한 '생산-교환-분배-소비'하는 경제활동 방식'이다. 지역순환경제이며 협동과 연대를 통해 지역사회를 활성화시키는 유력한 실천수단이다. 이를 위해 전라북도는 소상공인과 골목경제 활성화, 사회복지 서비스 체계 대폭 강화, 지역사회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다. 사회적 가치의 실현이 시대정신이다.



추진과제 1.

지역경제의 버팀목, 소상공인 육성과 골목경제 활성화

더불어 잘사는 지역경제 실현을 위해서는 소상공인과 골목경제 활성화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소상공인은 지역의 생산과 고용측면에서 선순환구조의 중추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소상공인과 골목경제가 지탱해온 공동체의 힘이 지역사회 유지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형 유통점의 골목상권 진출, 온라인 쇼핑의 성장, 젠트리피케이션 등이 지역상권을 위협하고 지역공동체 붕괴까지 야기하고 있다. 지역의 선순환경제 복원과 공동체성의 유지를 위해서는 첫째, 지역 골목상권과 대형유통점이 상생협력할 방안마련이 필요하다. 민생에 영향이 큰 업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고, 지역상권 내몰림방지 등에 대한 법제화를 통해 소상공인의 생업권을 보호해야 한다. 둘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자생력을 강화해야 한다. 소상공인의 수익성과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조직화·협업화 지원을 강화하고 유망 소상공인을 발굴·육성해야 한다.

추진과제 2.

일자리 연계형 포용적 복지서비스 제공기반 구축

문재인 정부는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확충해 나가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연계하여 전라북도의 복지수요에 대응한 높은 예산투자를 공공주도의 복지분야 일자리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도민의 복지욕구가 높은 사회서비스분야는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을 활용하여 마을과 지역기반의 복지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현재 제공되고 있는 사회서비스 일자리에 임금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근무환경을 개선하여 안정적인 고용환경에서 적정급여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복지수요가 높아 고용창출 효과가 큰 심리상담, 돌봄, 교육 등의 사회서비스 영역은 지역맞춤형으로 새롭게 발굴해야 한다. 그리고 고용인력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취업교육과 보수교육을 통해 시장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고용과 복지가 선순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추진과제 3.

지역사회에 기반한 사회적경제 생태계의 구축

정부 부처가 합동으로 '사회적경제 활성화'통합정책을 마련했다. 사회적경제 기본법 등의 제도적 기반도 갖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 조직의 순기능과 중요성에 우리 사회가 주목한 결과이다. 사회적경제 조직은 지역사회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에서 사업과 활동에 필요한 기반을 잘 구축해야 한다. 도와 시·군에서 사회적경제 활성화 조례를 제정하고 통합적인 정책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사회적경제 조직의 금융접근성도 높이고, 공공영역에서 상품과 서비스의 판로확대를 위한 지원도 절실하다. 지역사회에 기반해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인력도 체계적으로 양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 사회적경제의 혁신과 지속가능을 담당할 핵심거점으로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혁신타운'조성을 현실화해야 한다.



09 위험을 알고, 줄이고, 피할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사람중심 안심전북

안전은 우리사회 최우선 아젠다로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 측면에서 '안전한 삶'이 기본권리로 인식되고 있다. 지진을 포함한 폭염, 한파, 풍수해, 가뭄 등의 자연재해의 위협이 지속되고 있으며, 전 지구적 기후변화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불안감은 더 커지고 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원전 안전에 대한 우려와 함께 탈원전 정책이 구체화 되고 있으며,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 유해화학물질 등의 유해환경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졌다, 또한, 새로운 형태의 젠더폭력을 포함한 각종 사회범죄에 의한 도민들의 불안감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안전 기본권 시대에 전라북도가 직면한 위험 요소를 분석하고 물리적, 정신적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최고의 가치'인 현 정부의 사람중심 안전 패러다임을 배경으로 2018년 전라북도가 준비해야 할 추진과제를 모색하였다.



추진과제 1.**재해취약성 평가를 통한 전북형 스마트 지진 대책 추진**

경주에 이은 포항지진은 전라북도도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경고와 함께 도내 지진 위험 특성분석, 대책수립 등에 대한 과제를 제시하였다. 전라북도는 지진 대응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실무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지역 특성에 적합한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인구고령화, 노후시설, 연약지반, 미조사 단층 등 재해취약 요인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수행하고 과학적 분석을 통한 지진 안전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전라북도 지진 재해취약성평가, 재해 상황전파체계 고도화, 전북권 광역거점방재센터조성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추진과제 2.**탈원전 정책 및 신재생에너지 3020 선도를 위한 기반 마련**

정부는 원전과 석탄발전의 비중은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전력생산량을 2030년까지 20%를 목표로 풍력, 태양광 등의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과 보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전라북도는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육성해왔으며, 2011~2015년간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은 124% 증가하는 등 지속적인 보급사업을 추진하였다. 특히, 전북형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사업은 마을단위 에너지 복지는 물론 지역공동체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대표적인 에너지 전환 사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전북 에너지 거버넌스 구축, 에너지 농부 클럽 조성, 에너지 자립마을 확대, 서남해 해상풍력 주민이익 공유, LED 보급 확대 등을 통해 지역단위 에너지 전환을 가시화 할 수 있는 선도사업 추진이 필요하다.

추진과제 3.**통합물관리 모델 구축 및 미세먼지 대책 구체화**

정부의 환경분야 최대 이슈는 통합물관리(홍수, 가뭄, 수질 대응 등)와 미세먼지이다. 현재 4대강 권역별 포럼 운영, 관련 체계 및 제도 정비 중인 통합물관리는 2018년 구체적인 시행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전라북도는 풍수해 방지, 안정적인 유량 확보와 함께 전체 물 사용량의 80%이상인 농업용수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통합물관리 모델 구축 시범사업(스마트 물관리, 농업배수 관리 등) 참여가 필요하다. 또한,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전라북도 (초)미세먼지 대응을 위해 전북권 대기오염 집중측정소 설치 등을 통해 국가차원의 원인분석과 그 결과에 따른 과학적인 미세먼지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 (초)미세먼지 관리를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연구 확대, 내부 생성 물질 및 오염원 직접배출 관리, 외부유입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건강관리 지원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추진과제 4.**젠더폭력 사각지대 해소 및 폭력 예방체계 마련**

현행법령은 젠더폭력 문제가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에 대해서만 협소하게 규정되어 있으나 스토킹, 인신매매, 데이트폭력, 여성에 대한 증오(혐오)범죄,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 사용 확대에 의한 디지털 성범죄 급증 등 젠더폭력의 범주가 다양해지고 있다. 관련 범죄는 사안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어 범죄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규제하는 조치와 여성 피해자 보호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여성폭력 피해 감소를 위한 실태조사와 젠더폭력 관련 통계 구축, 생애주기별 폭력예방체계 마련, 체계적인 안전교육 관리, 저위험 집단과 고위험 집단을 구분하여 특화된 교육과 보호지원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10 자치분권으로 내발적역량 강화, 지방선거로 전북비전 실현계기

국정과제 중 지방분권과 분권형 개헌 등이 핵심과제로 선정되어 자치분권의 제도적 기반이 강화되고 지역의 자율성을 중시하는 지방분권 추진체계가 본격적으로 구축된다. 2018년은 국가사무의 획기적인 지방이양과 재정분권 등이 강조됨에 따라 전북의 신규 국가사무 이양에 따른 재정보호와 지방교부세 등의 실익을 면밀히 검토하고 대응해야 할 시기이다. 또한 지방선거를 통해 민선기기가 새롭게 시작하는 한 해이기도 하다. 지방선거는 전북발전의 새로운 비전이 모색되고 선보이는 계기로 이를 전북발전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추진과제 1.

전북형 지방분권 로드맵 수립과 체계적 추진

지방분권의 제도적인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주민자치권의 보장 및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헌법에 규정하는 지방분권 개헌이 본격화되어 국민투표가 추진될 예정이다. 또한 지방의 입법권, 자치 조직권, 복지권 등 4대 지방자치권 보장을 위한 기반 구축 및 국가사무의 지방이양 등이 추진될 예정임에 따라 지방의 역할 및 기능, 업무 등이 확대될 것이다. 따라서 정부의 지방분권 로드맵에 따라 체계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전라북도 자치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행정시스템 구축 및 전라북도민의 수요에 맞는 지방분권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

추진과제 2.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재정분권 내실화

열악한 지방재정의 자립을 강화하기 위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조정하고 지방소비세 및 지방교부세, 지방소득세 등의 인상이 추진되고 있다. 정부의 재정분권은 국가 재정의 균형화 및 지역 재정의 형평화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또 다른 재정력 격차 발생과 지방교부세의 총량이 감소할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재정조정제도를 개편하고, 일부 세수 증가분의 전국 공동세화 방안, 지역지원시설세의 공간 범위 확대, 담뱃세의 세입구조 회복 등의 과제에 대응하여 재정분권의 내실화를 도모해야 한다. 자칫 지방재정 자립이 지방간 격차를 더 크게 벌리는 정책이 되지 않도록 지방정부차원의 연대를 통한 대응이 필요하다.

추진과제 3.

주민 중심의 전북형 주민자치 활성화

이제 지역 주민들을 위해, 지역주민에 의한 주민자치 활성화가 이루어진다. 혁신읍면동 센터가 도입되어 지역주민 중심으로 바꾸면서 커뮤니티 허브로 조성되고 지역의 유휴 공간을 활용하여 평생 학습 기반이 만들어 진다. 또한 읍면동장을 지역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시범사업과 더불어 지역 주민 스스로가 마을 계획을 수립하고 직접 정책과 예산을 결정할 수 있는 기회 등이 제도화되어 더 많은 주민의 참여가 활성화된다. 이에 전북도민의 공공서비스 수요 등을 반영하여 도민이 행복하고 삶을 바꿀 수 있는 전북형 주민자치 플랫폼을 구축하여 주민자치 활성화를 추진해야 한다.

추진과제 4.

지방선거와 미리보는 전북비전 2022

2018년 6월 13일은 2022년까지 전라북도와 시군을 이끌 지방의회 의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뽑는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가 치러진다. 2018 지방선거는 2022년까지 지방정부를 이끌면서 지역의 새로운 발전상을 제시하는 지역비전의 각축장이 될 것이다. 전라북도 또한 다양한 전북비전이 제시되고 향후 2022년의 전라북도를 미리 그려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및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정책을 어떻게 전북발전으로 연계할 것인지가 모색되어야 한다. 또한 민선6기의 성과를 어떻게 계승할 것인지와 민선7기의 새로운 전략사업 발굴 등이 제시되어야 한다. 지방선거를 삼락농정, 토탈관광, 탄소산업의 정책진화와 전북의 신성장전략 모색의 각축장이 되도록 정책선거로 만들어야 한다.



전북연구원

(55068)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공취팔쭈로 1696(효자동3가1052-1)

Tel.063-280-7100 Fax.063-286-9206

www.jthink.kr

